

한류와 혐한의 문화갈등과 충돌의 경계넘기를 위한 제안: 동북아시아 혼종문화거버넌스 체제의 모색*

김종범**

| 목 차 |

- | | |
|---------------------------|--------------------------------------|
| I. 서론: 한류의 확산과 혐한(嫌韓)의 심화 | 년스'와 그 실현 가능성 |
| II. 혐한류와 신한류의 공존과 전망 | IV. 혼종문화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위한 방법론적인 제안과 가능성 |
| III. 동북아시아에서의 '혼종문화거버 | |

| 논문요약 |

본 논문에서는 한류의 확산과정과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는 3.0의 신한류 시대를 맞아, 특히 동북아시아지역에서 혐한이라는 문화갈등과 충돌이 발생하는 원인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넘어서기 위한 대안으로 '혼종문화거버넌스'라는 개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성을 하고 있다. 먼저 서론에서는 한류의 심화와 확산이 갖는 역설적인 현상으로서 혐한 발생의 대안 제시로서 동북아시아에서의 혼종문화거버넌스 제시의 필요성과 의미를 설명하고자 한다. 둘째 장에서는 동북아시아 혐한 현상을 중국과 일본 등의 주요 국가에서 발생하게 된 양상과 원인 등을 분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한류의 심화가 갖는 역설적이고 부정적인 효과와 혐한 현상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도 함께 제시하게 될 것이다. 셋째 장에서는 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 혼종문화거버넌스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혼종문화거버넌스' 개념과 구성 요소들을 실용적인 수준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넷째 장에서는 동북아시아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제시하고 있

* 이 논문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3A2052725).

** 대전대학교 글로벌융합창의학부 조교수.

는 ‘혼종문화거버넌스’ 체제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과 방법에 대한 제언으로 결론을 갈음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한류의 확산이 갖는 긍정적인 측면이 혐한이라는 부정적인 현상을 뛰어넘어 문화공존의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는 시도로서 ‘문화거버넌스’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자 한다. 거버넌스라는 개념과 체제의 정의조차 그리 쉬운 작업이 아니겠지만, 문화공존을 수용하고 그러한 문화가 단일하거나 지나친 국가주의를 배제한 타협과 합의의 혼종문화를 지향할 수 있는 새로운 구성과 체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이를 위해 국가가 아닌 로컬(local) 중심의 새로운 혼종문화 공동체의 실현을 위한 이론적이고 체제적인 제안을 하고자 한다.

· 주제어: 한류, 혐한류, 혼종문화, 거버넌스, 동북아시아

I. 서론: 한류의 확산과 혐한(嫌韓)의 심화

한류(韓流, Korean Wave 혹은 Hallyu)가 하나의 세계적인 문화확산 현상이 된 지 20여 년이 지났다. 1990년대 이후 시작된 제1세대 한류의 시작은 어느덧 제2세대를 넘어 ‘한류 3.0’이라는 제3세대를 지나고 있다. 그러나 제3세대의 한류는 수용되는 지역에서 반한 감정과 맞물려 ‘혐한(嫌韓)’이라는 문화갈등과 충돌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한국 문화의 확산이 도리어 부정적인 효과와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반한류 상황을 지속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따라서 작금의 한류라는 현상이 시작된 이래 가장 커다란 위기의 시기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류는 대한민국의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한국에 관련된 문화 영역과 분야가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들에서 사람들에게 유무형의 상품이나 현상으로 만들어져 대중적인 인기를 얻게 된 현상을 의미한다. 주지하다시피 1990년대에 한국 문화의 급성장이 빚어낸 파생된 신조어다. 이는 1986년 아시아게임과 1988년 올림픽이 한국에서 개최된 이후 점차 한국과 한국 문화의 소개와 영향력이 다른 국가에서 급성장함에 따라 생긴 단어이다.

특히 이러한 흐름이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이 동북아시아지역이었고, 1999년 베이징 기자들이 중국 내부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다양한 선호와 수요 급증을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낸 단어이자 현상이었다.

지난 20여 년간 급속하고 빠르게 확산되던 한류 현상이 주춤하고 있는 사이, 중국과 일본 등의 주요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반한 감정과 함께 한국을 혐오하는 현상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한류의 확산이 갖는 다소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동북아시아를 넘어서면 이러한 문화 충돌과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혐한 현상은 아직까지는 미미하거나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비록 한류의 확산이 동북아시아지역의 국가들보다는 늦게 시작되었지만, 미주나 남미, 유럽이나 중동 등은 여전히 한류 현상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 한류 심화 현상으로 발생하는 혐한이 다른 지역에서는 발생하지 않거나 미미한 원인은 무엇일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수준에서 그 원인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류 확산 속도의 차이에서 오는 이유일 수도 있고, 수용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국적인 문화의 수용이 민족적인 정체성에 반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또한 국가주의가 강한 국가이나 아니냐에 따라 그 수용과 반발의 정도가 다를 것이다. 또한 경제구조의 차이나 해당 지역의 법률적이고 제도적인 정비 수준의 정도에 따라 그러한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한류의 확산과정과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는 3.0의 신한류 시대를 맞아, 특히 동북아시아지역에서 혐한이라는 문화갈등과 충돌이 발생하는 원인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넘어서기 위한 대안으로 '혼종문화거버넌스'라는 개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성을 하고 있다. 먼저 서론에서는 한류의 심화와 확산이 갖는 역설적인 현상으로 혐한 발생의 대안 제시라는 점에서 동북아시아의 혼종문화거버넌스 제시의 필요성과 의미를 설명하고자 한다. 둘째 장에서는 동북아시아 혐한 현상을 중국과 일본 등의 주요 국가에서 발생하게 된 양상과 원인 등을 통해 분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한류의 심화가 갖는 역설적이고 부정적인 효과와 혐한 현상 발생을 방

지할 수 있는 대안도 함께 제시하게 될 것이다. 셋째 장에서는 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 혼종문화거버넌스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혼종문화거버넌스’ 개념과 구성 요소들을 실용적인 수준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넷째 장에서는 동북아시아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제시하고 있는 ‘혼종문화거버넌스’ 체제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과 방법에 대한 제언으로 결론을 갈음할 것이다.

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 지역공동체 논의는 이미 오래 전부터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지역공동체 모델로서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그 취지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공동체는 여전히 요원하고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인식된다. 경제공동체와 정치공동체 형식의 다양한 시도는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재무장화 등이 맞물리면서 더 이상의 진전은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그러나 한류라는 현상의 시작은 동아시아, 특히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한류의 확산이 갖는 긍정적인 측면이 험한이라는 부정적인 현상을 뛰어 넘어 문화공존의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는 시도로서 ‘문화거버넌스’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자 한다. 거버넌스라는 개념과 체제의 정의조차 그리 쉬운 작업이 아니겠지만, 문화공존을 수용하면서 문화의 단일성이나 지나친 국가주의를 배제한 타협과 합의의 혼종문화를 지향할 수 있는 새로운 구성과 체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이를 위해 국가가 아닌 로컬(local) 중심의 새로운 혼종문화 공동체 실현을 위한 이론적이고 체제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Ⅱ. 험한류와 신한류의 공존과 전망

1. 험한류의 등장과 배경

200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하기 시작한 험한 현상은 그 발생 원인과 형태 등에서 국가별로 편차가 존재한다. 이번 장에서는 험한이라는 현상이 어떻게 발생하였고, 그 원인과 내용은 무엇인가를 중국과 일본의 사례를 통해 서술하고자 한다. 동북아시아의 대표적인 두 개의 국가를 선택한 것은

한류의 진원지이기도 하지만 혐한 현상의 발생지이기도 하며, 혐한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국 한류도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의 현재 한류 현상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혐한의 해결은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는 동북아시아 공동체 건설을 위한 새로운 시도와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혐한 현상의 등장은 두 가지 수준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개별 국가 차원의 내부적인 문제이며(강동국 2006; 고길희 2007; 박수옥 2009; 박순애 2009, 242-3), 두 번째는 동북아지역의 국제정치경제적인 배경이었다(김수정·양은경 2006; 류용재 2008). 먼저 개별 국가 차원의 내부적인 문제를 살펴보면 중국과 일본의 상황이 다르게 작용하였다. 이 시기 중국의 내부적인 조건과 환경에서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혐한의 주요 원인은 현상적인 측면에서 한국의 지나친 민족주의적 시각에 입각한 대중국 태도와 현안에 대한 대처라는 분석이다(이동연 2006; 박정수 2012). 또한 중국 정부가 새로운 유형의 ‘중화주의(中華主義)’를 지향하면서 대내적인 결속을 중화주의에 반하는 한국의 중국 비하와 민족주의적인 성향에 적극적인 대처와 반응을 보인다는 점 역시 중국 내의 혐한 현상을 하나의 지속적인 현상학적인 흐름으로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동북아의 대외적인 국제정치적인 환경과 조건은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공정 과정에서 돌출된 한류의 확산이나 한국 문화에 대하여 제거해야 할 장애 현상으로 인식하면서 혐한 현상으로 발전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동북아에서 한국 정부의 외교적인 추가 지나치게 친미 중심으로 흐르면서 반한 감정이 중국 국민들에게까지 흐르고 있다는 점이다(박홍서 2008).

이에 반해 일본의 경우에는 좀 더 복잡한 상황이 복합적이고 상호 연관되어 혐한 현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한일 관계라는 것이 다소 적대적이고 반한과 반일의 감정과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다는 점에서 혐한이라는 현상이 새로운 것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기존의 반한 감정과는 다른 형태의 혐한 현상은 드라마 <겨울연가>로 시작된 일본에서의 한국 연예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열풍에 반하는 지속적인 현상이라는 점에서 반한 현상과는 구분이 필요하다.

일본에서 혐한 현상을 주도하고 있는 이들은 극우 보수주의 세력이다. 일본 극우 세력의 존재는 역사적으로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온 실제 세력이며, 이들이 사회적으로 전면에 등장하고 왕성한 활동을 벌일 수 있게 된 것은 국내적으로 아베 정권의 등장이라는 계기였다. 한일 관계의 역사적 특수성은 1948년 이후 양국 관계를 우호적이거나 동맹 수준으로 진전시키지 못하였다. 그러나 문화적으로 일본에서 한류가 새로운 흐름으로 인기를 끌면서 적어도 민간 차원에서는 일본에서의 친한에 대한 그리고 한국에서 일본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흐름이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혐한이라는 현상으로 발생한 계기는 한일 간의 영토 분쟁을 가져오게 된 ‘독도문제’의 부각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의 이와 같은 동북아에서의 영토분쟁은 비단 한국과의 문제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한국과의 영토분쟁은 끝이어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영토분쟁을 더욱 촉발시켰고, 이는 일본의 재무장화와 정상국가로의 전환에 국내 정치적인 환경과 기반을 다지는 데 중요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최희식 2013, 34-35). 이 과정에서 일본 정치가 극우주의와 군국주의를 지향하는 극우 보수주의 정권의 등장을 촉발시켰고, 이러한 배경 아래 아베 정권이 탄생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일본의 40대 전후의 아줌마 계층으로부터 촉발된 한류에 대한 사회적인 비난이 독도 문제와 재일 한인 등의 문제와 연계되면서 한국 문화와 한국에 대한 반한 감정이 혐한 현상이라는 집단적인 사회적 증오로 발전되었다.

이와 같은 동북아지역의 정치적 지형의 변화와 새로운 현상으로서 혐한의 등장과 지속은 한류의 확산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산업 발전에도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혐한을 넘어서는 새로운 한류 발전의 전기를 위해서는 한류나 혐한이 초래하고 있는 극단적인 갈등과 문화충돌을 넘어서는 새로운 유형의 해결 방식이 필요하며, 이는 동아시아 공동체의 발전과 형성에도 필요한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2012년을 기점으로 변화된 동북아의 지형과 정치적인 환경에 유의하여 한류의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확산과 한국 문화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인 접근과 모색이 필요하다.

2. K-Culture와 신한류의 문화거버넌스 제안

2012년 이후 동북아시아는 관련 국가 모두에서 정치권력의 교체가 발생했다. 중국은 시진핑 체제를 출범시키면서 보다 강력한 중국이라는 국가주의를 내걸고 새로운 의미에서의 중화주의 체제의 안정과 강화를 외치고 있다. 미국 역시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으로 인한 새로운 미국을 위한 세계전략을 새롭게 구성하였으며, 일본을 앞세워 동북아 질서를 유지하려는 의도와 정책을 도입하였다. 일본은 아베 정권의 등장과 함께 새로운 군국주의의 부활과 정상국가로의 환원을 내세우면서 미국을 대신하여 동북아시아의 맹주임을 자처하고 있다. 북한 역시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중국 일변도의 외교에만 매달리지 않고 러시아를 비롯한 주변 강대국들과의 새로운 협력 체제를 모색하면서, 예상과는 달리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도 박근혜 정부의 등장과 함께 새로운 보수주의 정권이 들어섰지만, 강력한 중국과 일본의 부상을 내세운 미국의 외교 전략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례없는 경제위기와 국가적인 위상 약화를 경험하고 있다(허태희 2014; 전현준 2012).

이러한 위기 상황은 한국 문화를 대표하던 한류의 약화로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중국과 일본이 중심인 동북아시아에서 한류는 초기의 인기와 열풍에 비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가히 한류의 위기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정책적인 전환과 보다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항에서는 우선적으로 이러한 한류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새로운 몇 가지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한류라는 명칭에 대한 한국 정부와 학계의 전반적이고 심도 깊은 검토와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한류라는 명칭은 우리의 입장에서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대표적으로 표현한 명칭이나 용어가 아니라 현상학적인 측면에서 1999년 이후 중국에서 유행되었던 한국의 드라마를 비롯한 음악과 영화의 흐름을 지칭하는 명칭이자 개념이었을 뿐이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 문화의 모든 부문과 영역이 중국이나 일본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동북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류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할 것인지

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대안이 필요한 때이다. 그런 이유로 한류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용어와 개념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번 항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한류의 대체용어로서 K-Culture를 제시하고자 한다.

K-Culture라는 용어를 본 논문에서 처음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나 한국해외문화원 등의 조직을 가진 문화관광체육부 등에서 조심스럽지만 K-Culture라는 용어와 개념을 사용해 왔다(KOTRA 2013; 문화관광체육부 해외문화홍보원 2013). K-Culture라는 용어의 필요성과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전통적인 한국 문화라는 개념과 영역에서 탈피하고 포괄적이고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한국 문화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누구나 공감하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개념의 필요성이다. 다행히 K-Culture라는 용어 안에는 Korean Wave로 표현되는 한류나 K-pop, 혹은 한국 드라마나 영화 등의 거의 모든 문화의 영역을 포함할 수 있다. 이는 변화된 21세기의 글로벌 문화지형에 적합한 용어로 K-Culture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한다. 두 번째는 K-Culture라는 용어의 사용으로 한국학 중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학문적인 분류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K-Culture를 사용함으로써 한국학의 하위 분야에 대한 연구 분류가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공부하는 분야인가에 대한 분명한 영역 구분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런 의미에서 K-Culture 용어의 사용은 시의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급속하게 확산되고 발전되고 있는 글로벌 사이버 세계에서 K-Culture라는 용어는 사용자들이 사용하기에도 편리하고 그 의미를 분명히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유용할 수 있는 개념과 용어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물론 K-Culture의 사용이 지금까지 한류로 대표되는 한국 문화의 확산을 가속화하거나 더 많은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지금까지의 한류라는 용어와 개념이 변화된 디지털 환경과 조건에서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한류에 대한 부정적 현상으로서 혐한이라는 상황과 내용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새로운 용어를 통한 보다 분명한 문화정체성을 표현할 필요가 있다. 이는 K-Culture라는 용어 사용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동북아에서 주요 국가들이 문화적인 갈등과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류를 통해 문화적인 헤게모니를 유지하고 우위에 서겠다는 국가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접근과 방법보다는 문화공존의 가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도 국가별로 자신들의 문화를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의 하나로써 K-Culture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시 말해 일본 문화를 J-Culture로, 중국의 문화를 C-Culture로 구분한다면 동북아시아에서의 문화공존 가능성을 훨씬 높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런 의미에서 한류라는 문화 현상에 대한 우리 식의 문화적 우위와 헤게모니를 전면에 내세울 것이 아니라 동북아지역에서의 문화공존을 위한 방식으로서 K-Culture와 다른 국가들의 문화를 각각 표현하는 문화공존의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제안은 한류를 넘어 신한류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한국 문화 전반에 걸친 체계화와 안정화에도 충분한 동력과 계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신한류’로서 K-Culture의 확산과 문화 세계화에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며, 동북아시아에서의 문화갈등과 충돌을 넘어설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문화공존은 상호 문화가 개방된 상태에서 수용과 전파가 이루어지는 문화 확산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문화공존거버넌스 형태와 방식을 따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혼종문화거버넌스(Hybrid Culture Governance)’라고 명명하게 될 것이다.

III. 동북아시아에서의 ‘혼종문화거버넌스’와 그 실현 가능성

1. 동북아시아에서의 문화갈등과 충돌을 넘어서기 위한 시도로써 ‘혼종문화거버넌스’

동북아시아에서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은 각각 교차적이면서도 복합적인 이해관계의 갈등과 충돌로 상대국가에 대한 비난과 증오 현상이 빈

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곳이다. 때론 국가주의를 내세우거나 다른 경우에는 민족주의를 앞세우면서 동북아 3개국은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자주 충돌하였다. 그것은 국익과 민족적인 감정이 앞서기도 했지만, 3개 국가 모두 자신들이 가장 우월하고 뛰어나다는 자긍심과 다소 맹목적인 일방적 우월주의에 근거한 현상이었다. 이들 국가에서 상대 국가의 문화란 그저 자국 문화의 우월성을 비교하는 근거이자 기준점이었을 뿐이었다. 그런 국가들에서 한국 문화의 새로운 트렌드로서 한류가 등장한 상황과 유행 현상은, 한국의 입장에서 아시아를 한국 중심으로 묶어 줄 수도 있다는 환상을 가지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와 환상이 허물어지는 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중국과 일본은 국가가 직접 나서거나 시민사회와 학자들을 통해 한류의 확산을 동북아시아에서의 문화주권의 위기와 문화정체성 훼손이라는 주장을 내세워 반한 감정과 혐한 현상이 발발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인 기반과 환경을 조성하였다. 중국이 제시했던 동북아 공정과 같은 기획이나 일본이 끊임없이 제기한 영토분쟁 등의 상황은 대외 갈등을 통한 대내적 통합과 단합을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동북아지역에서의 이러한 문화갈등과 충돌의 혼란스러운 상황은 새로운 문화 현상으로 유행하던 한류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반한과 혐한과 같은 문화 혐오와 증오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화갈등과 충돌을 해결하고 정체되어 있는 한류의 새로운 확산과 발전을 위해서는 전략과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전략과 정책 전환을 ‘혼중문화거버넌스’를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혼중문화거버넌스라는 개념과 용어 속에는 세 가지 요소에 대한 분석과 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는 혼중(hybrid)의 의미이며, 둘째는 거버넌스에 대한 규정이고, 셋째는 문화거버넌스의 의미이다.

첫 번째 분석의 대상인 혼중 개념에는 융합이나 혼성 혹은 혼합을 나타내는 사전적인 의미가 존재한다. 그러나 문화의 영역에서 사용하는 혼중은 문화횡단(transculturation)이나 이질적인 문화의 융합과 섞임이라는 단순한 개념 정의보다는 공존과 소통 그리고 교류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문화의 경계를 넘고 횡단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적 사고에 입각하여 새로운 차원의 문화적 보편성을 형성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김용규 2014, 24). 이런 이유로 오늘날 문화생산과 기획은 민족이나 국가의 경계를 넘어 지역과 인접 국가의 문화를 모두 포함하는 국가 간의 횡단과 혼종 현상이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다(Kraidy 2005; 류용재 2008). 이러한 글로벌 문화 영역의 지형 변화와 조건은 변방에 불과했던 한국이 한류라는 문화 현상을 통해 미국이 중심이 되는 서구 주류 문화와 중국과 일본이 중심이 되었던 아시아 주류 문화를 대체하는 국가로 등장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김용규 2014, 300-342).¹⁾ 여기에는 서구 중심적이고 식민지 시대의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흔적에 따른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와의 공존이라는 의미로 문화 수용과 확산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변부의 문화가 어떻게 중심부 문화를 대체하는 활력을 보여줄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방식이 존재한다.(T. Cowen 2002, 18-24)

따라서 이러한 개념과 의미를 동북아시아에 적용하자면 다음과 같은 방식과 내용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먼저 중국이 주도하는 전통적인 유교적 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동양 문화로서 중국에 대한 막연한 추종이나 인

1) 문화혼종과 문화횡단에 대한 내용은 좀 더 많은 부연 설명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혼종문화론이나 문화횡단론이 아니기에 본 논문의 주장에 공감과 이해가 필요한 선에서 주변부 국가의 주류 문화의 등장에 대한 주장은 문화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문화횡단을 주장하는 이론으로 시작하여 포스트식민주의의 혼종성과 문화횡단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오르티즈(Ortiz)와 라마(Rama) 등이 주장하는 문화제국주의비판이론은 중심부와 주변부의 쌍방향적인 문화역동성을 강조하는데, 이를 문화횡단과 혼종이론으로 설명하고 있다. 쿠바의 인류학자 오르티즈가 유럽중심적인 문화동화(acculturation)을 대체하는 문화횡단을 사용하여 단순한 문화이동과 통합을 강조하기보단 토착문화와 외래문화 간의 탈적응과 재적응, 문화동화와 문화탈피라는 비선형적 복합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개념을 라틴아메리카 전체로 확대한 라마는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문화횡단이 갖는 선별적이고 창조적인 주체의 문제를 분석함으로써 주변부 문화가 어떻게 중심부 문화와의 충돌이나 갈등을 피하면서 지역의 문화로 대체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유와 설명의 모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개념과 문화집변과 이동 현상을 보다 급진적으로 현대적인 의미로 해석한 이들이 호미 바바(Homi Bhabha)와 칸클리니(Canclini)이다. 이들은 문화의 기원이란 진정성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미래적인 수행성 속에서 끊임없이 실험하고 새롭게 구성해 나가는 개념으로 혼종성을 제시한다.

정이 아니라 독자적인 세부 영역으로 C-Culture에 대한 이해와 인정, 일본의 군국주의와 군사대국화 경향을 저지하면서 일본 문화의 독특함과 문화적인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공존, 한류라는 새로운 유형의 주변부 문화를 민족주의적인 우월함이나 갈등의 요소로 파악하여 국가주의적인 거부나 증오의 대상이 아닌 동북아시아의 문화세계화의 하나의 시도로서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결국 세 국가 모두 각자의 독자적인 문화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새로운 문화의 흐름을 적대적이고 갈등의 요소라고 파악하기보다는 탈아시아를 향한 새로운 시도로써 함께 노력할 수 있는 계기이자 추진 동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통의 인식과 상호 인정을 위해 국가 혹은 정치권력은 가능하면 배제한 상태에서 사회적 조정과 합의의 기제를 거버넌스의 틀 속에서 구현시켜야 한다.

두 번째로 제시하고 있는 거버넌스의 개념과 체제는 기존의 일반적인 거버넌스이론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중요한 이론적인 내용을 통합하여 정의하는 것이다. 그것은 사회정치체계 내 모든 행위자들의 상호 작용 노력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하나의 형태(form) 혹은 구조(structure)라는 의미와 새로운 사회적 조정양식으로서의 연결망(network)을 포괄적으로 포함시킨 거버넌스이론의 핵심적인 내용을 통합한 정의와 체제이다 (Rhodes 2000; Stoker 1998; Kickert 1997; Kooiman 2000). 이는 동북아시아의 역사적인 특수성과 개별 국가들 간의 갈등구조와 민족주의의 충돌을 억제하면서 공존과 상생의 문화협력의 가능성과 구체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거버넌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구조를 통해 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문화거버넌스 체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세 번째는 문화거버넌스에 대한 것이다. 거버넌스 개념과 체제의 문화 영역의 거버넌스가 문화거버넌스로 새롭게 정의한다면 문화거버넌스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협의의 개념에서 보면 문화거버넌스는 “직접적으로 문화적 목표를 가지는 협상, 행동, 실행의 체계, 제도와 규칙”으로 정의될 수 있다. 그러나 좀 더 광범위한 정의에서 보자면 슈미트(Schmitt)의 정의가 보다 적합할 것이다. 그는 문화거버넌스를 규정하면서 구성 요소의 주체 문제를 통해 정의하고자 했다. 슈미트가

주장하는 문화거버넌스의 주체는 ‘문화적 행위자(생산자)’, ‘사회적 행위자와 제도’, ‘행위자와 제도’를 모두 지칭하고 있다(Schmitt 2011, 41-51).

이러한 관점에서 문화거버넌스의 동아시아적인 맥락을 규정한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중앙정부를 배제한 로컬정부와 지역에 기반한 문화조직들, 둘째는 문화행위자로서 수용자와 문화보급자, 셋째는 문화전달 체계 안에 포함되는 방송과 언론계 및 유통체계, 넷째는 문화 분권과 학술적인 기능을 배분하는 시민사회단체와 학회 등의 민간단체 등이다. 이러한 내용은 기존의 문화거버넌스에 대한 사례와 구조에 집중하고 있는 선행 연구²⁾에 비하면 사회조정과 완충적인 역할에 초점을 둔 사회조정과 소통의 구조적인 네트워크와 합의체의 의미를 갖는다.

2. 혼종문화거버넌스의 요인과 구조

혼종의 개념과 문화거버넌스 체제의 결합이라는 측면에서 새롭게 제시하고자 하는 혼종문화거버넌스는 동북아지역의 각 국가별 특징과 기존의 정치경제적 요소를 강조한 다양한 지역협력체와는 분명 다른 구조와 내용을 갖는다. 또한 혼종문화거버넌스의 체제와 구조 속에서 단순히 소통이나 상호 인정의 의미를 부각시키기보다는 기존의 지배적 문화 헤게모니의 해체와 재구성을 통하여 획득된 공감과 이해에 기반한 공존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해당 국가에서 독점적이거나 전유된 일방적인 국가의 문화정체성을 완화하고 글로벌 문화 체제 흐름 속에 수용되는 문화

2) 이와 관련하여 한국에서 진행된 문화거버넌스에 대한 연구와 분석은 다음과 같은 유형과 분야가 있다. 첫째는 문화거버넌스에 대한 개념에 대한 연구(한승준·박치성·정창호 2012; Schmitt 2011; 공용택 2012; 김홍식 2004; 조황식 2007; 문태현 2005), 둘째는 문화거버넌스와 관련된 외국의 사례연구(한승준·박치성·정창호 2012; 윤광재·신성대·이희석 2011; 서순복·함영진 2008; 채원호·주동범 2003), 셋째는 지역 차원의 문화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연구(김승재 2012; 김병섭·김영래·서순탁 2012; 이주현 2011; 박규홍 2011; 조황식 2007; 김홍수 2004), 넷째는 문화재단 등 문화거버넌스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이재희 2012; 류춘호 2011; 신은경 2011), 다섯째는 문화분권과 배분기능에 대한 연구(박혜자·오재일 2003; 박혜자 1998)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척도와 수용성을 혼종문화거버넌스 체제와 구조 안에서 자동적으로 조정되고 타협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동북아시아에서의 공동체 형성과 발전에 관한 이론적 논의는 국제정치경제적인 관점에서 EU의 통합모델을 채용한 외교나 통상에 기초한 경제공동체에 대한 시도와 연구였다(김의곤·권경희 1999; 최영중 2000; 유현석 2001). 그러나 아세안(ASEAN)을 비롯한 수많은 논의와 시도들은 유럽연합의 모범사례를 동북아시아에 적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어찌서 동북아시아에서 유럽통합과 같은 방식으로 동북아시아 공동체가 진행될 수 없는가를 현실적으로 보여주었다. 대부분의 동북아공동체의 성격은 경제동맹체나 국제정치적인 협력 체제로 접근함으로써 각 국가들이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와 입장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드러낸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역설적인 효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동북아시아의 평화공동체 논의의 주된 이론적 틀이 예외주의, 혹은 이미 결정된 방향에서 논의되는 숙명론적 방향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절충적이고 주제와 내용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 혼합적인 기능주의로 설명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김명섭·이동윤 2005; 손혁상·최정호 2008; 오성동 2007).

따라서 지금까지의 동북아공동체 형성에 대한 논의나 주장은 근본적으로 그 방향성과 방법의 전환을 통하여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류라는 문화적 요소와 그 흐름에 기초하여 새로운 통합체나 동북아공동체를 주장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문화를 매개로 하여 절충적이고 기능주의적인 시각에 입각한 절충적 기능주의의 입장에서 주요 3개 국가의 문화가 소통과 공감을 통한 공존과 평화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방향에서 동북아공동체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 논문에서 시도하고 제안하고자 하는 형태는 절충적 기능주의 방법으로 현실화될 수 있는 혼종문화거버넌스 체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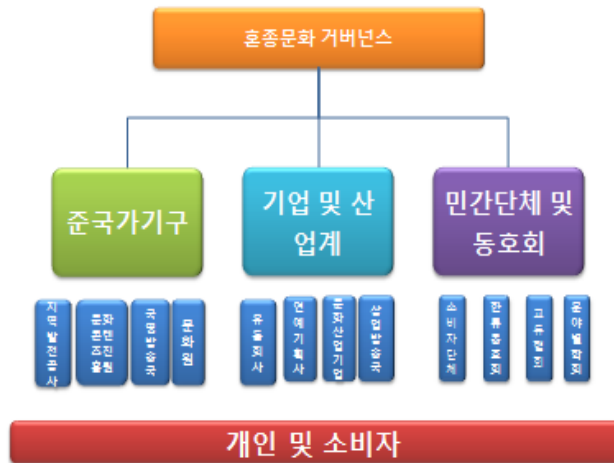
혼종문화거버넌스의 구성은 먼저 다차원적이고 다요소적인 구조와 요인에 의해 이루어진다. 먼저 문화의 유형을 통해 해석하는 혼종의 의미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의 문화나 한 국가가 주도하는 문화가 아니라 동북아 주요 국가의 문화를 모두 포함한다. 한국의 한류와 중국의 유교적 전통의

문화, 일본의 화려하고 외향적인 해양문화 등을 모두 포괄하고 각각의 문화를 K-Culture, C-Culture, J-Culture 등으로 개별 국가의 문화로 유형화하고 이를 종합한 동북아혼종(North-East Asian Hybrid)문화의 구성요소로 분류한다. 혼종의 의미를 다양한 문화의 공존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하고 소통과 상호 교류의 의미에서 문화에 대한 연대와 공감을 문화거버넌스의 구조 안에서 확산시키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거버넌스의 구조가 다차원적이고 다기구적이라는 점이다. 동북아의 혼종문화거버넌스는 절대로 국가나 국가권력이 개입되거나 구성요소로 자리 잡아서는 그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다양한 차원의 기구와 단체들이 거버넌스를 구성해야 한다. 예를 들면 문화콘텐츠진흥원과 같은 준(準)정부연구기관과 K-Culture를 보급하고 유통시키는 연예기획사연합이나 CJ와 같은 전문 유통회사들의 경제단체들이 일차적인 기구들이 될 것이고, 이차적으로는 동북아시아의 방송네트워크를 책임질 주관 및 관련 지방방송사 등을 각각의 주체로 참여시킴과 동시에 해당 지역의 민간친선단체들이나 한류동호회 역시 이러한 거버넌스 구조를 구성하는 주체로 참여시켜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문화거버넌스의 의미이다. 문화거버넌스라는 용어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학문적인 접근이나 정교한 분석이 이루어진 상황이 아닌 환경에서 문화거버넌스의 성격과 구조 그리고 의미를 새롭게 규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문화가 지배계급의 헤게모니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그람시(Gramsci 1975) 이후로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왔다. 레이몬드 윌리엄즈의 문화자본과 문화권력에 대한 논의 등은 문화가 갖는 의미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박만준 역 2012). 더군다나 문화가 일상의 영역, 다시 말해 개인이나 사회가 속한 집단에서 작용하는 일상의 모든 행태와 내용을 갖는다면 문화를 작동하는 사적 영역이 중심이 되는 거버넌스는 문화가 침투되어 상호 영향력을 주고받는 동북아지역의 모든 ‘문화적 행위자(생산자)’, ‘사회적 행위자와 제도’, ‘행위자와 제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다차원적이고 다요소에 의해 이루어진 혼종문화거버넌스의 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1> 혼종문화거버넌스의 구조



이와 같은 구조에서 유포되고 확장되어 동북아에서 상호 교류가 가능한 문화의 유형은 주요 국가의 문화들이다. 한류라는 명칭으로 더욱 많이 알려진 한국 문화와 중국의 다양한 다민족적인 유교문화와 화려하고 외형적인 일본 문화 등이 핵심적인 국가 단위의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하부에는 다양한 영역의 분야를 위치시킴으로써 체계적인 학문과 분야별 유형화를 모색하고자 한다.

<표 1>은 혼종문화거버넌스의 요소를 보여주고 있다. 다음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동북아에서의 혼종문화거버넌스는 새로운 거버넌스의 구조를 만들거나 한류 혹은 한 국가의 문화를 중심으로 통합체나 공동체와 같은 유형으로 구성하지는 의미보다는 현재 동북아에서 확산되고 있는 국가 간의 갈등과 문화충돌 현상을 뛰어넘어 조정과 화해가 바탕이 되는 공존의 장을 모색하기 위한 일종의 시도로서 제안하는 의도를 담은 것이다. 하나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제도로서 거버넌스의 구조를 안정화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까지 동북아에서의 수많은 공동체 실현을 위한 시도들이 가시적인 성과들을 보이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류가 촉매가 되어 시작된 문화공동체에 대한 방법과 시도를 제안하는 것이다.

<표1> 동북아혼종문화(North-East Asian Hybrid Culture)의 구성요소

	유형	분야	구체적 영역 사례
N E O 혼 종 문 화	K-Culture	K-Drama	한국 드라마
			한국 예능프로그램
		K-Film	한국형 블록버스터영화
			한국 독립영화
		K-Pop	한국 대중음악
			한국 고전음악
		K-Food	한국 전통음식
			한국 사찰음식
		K-Beauty	한국 의상
			한국 화장
	K-Arts	한국 미술	
		한국 도예	
	C-Culture	C-Drama	중국 드라마
			중국 예능프로그램
		C-Film	중국 무협영화
			중국 고전영화
		C-Pop	중국 대중음악
			중국 고전음악
		C-Food	중국 전통음식
			중국 지역음식
		C-Beauty	중국 의상
중국 전통미			
C-Arts	중국 미술		
	중국 도예		
J-Culture	J-Drama	일본 드라마	
		일본 예능프로그램	
	J-Film	일본 영화	
		일본 예술영화	
	J-Pop	일본 대중음악	
		일본 고전음악	
	J-Food	일본 전통음식	
		일본 현대음식	
	J-Beauty	일본 의상	
		일본 화장	
J-Arts	일본 미술		
	일본 도예		

그것은 혼종문화거버넌스를 특정한 하나의 구조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과 사회 체계를 모두 포함하고 시민사회와 민간 영역 및 개인까지를 아우르는 수준에서 문제 해결의 다양한 방법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특히 <그림1>과 <표1>에서 보여준 구조와 구성요소에 대한 것은 동북아시아의 주요 3국에 대한 국가학의 새로운 분류와 영역으로 체계화할 수 있다. 더군다나 학문적으로도 충분한 의의와 공헌을 할 수 있는 분류와 분석 작업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한국학의 하부구조로서 K-Culture가 성립되어 구조화된다면, 중국학이나 일본학이라는 지역학에서의 지역문화 연구의 체계성이 갖추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각각의 효용성과 학문적인 기여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제안이나 시도가 하나의 구체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엄밀성과 체계적인 구조화의 후속 작업을 통해서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요원하고 지난한 작업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시도와 제안은 몇 가지 측면에서 유용함을 가질 수 있다. 첫째, 동북아의 지역학을 구조화하고 재정립하는 데 유용한 분류화 작업이라는 점이다. 둘째, 한류가 갖는 문화적인 의미와 내용에 대한 재조정을 통하여 험한 현상을 축소시키면서 새로운 형태의 한류를 K-Culture로 재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와 구심점을 갖게 될 것이다. 셋째, 동북아에서의 문화가 개별 국가의 민족주의적 상징으로서 갈등과 충돌의 아이콘이 아니라 소통과 화합을 위한 공존의 아이콘이 될 수 있는 제도와 시장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를 통한 동북아공동체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시아에서의 지역통합을 위한 논의는 오랜 역사적 과정과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뚜렷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2012년 이후 동북아의 정치적 지형변화는 새로운 위기와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이는 일본의 재무장과 더불어 중국의 군사대국화까지를 앞당기면서 언제든지 새로운 국제적인 분쟁이나 무력 충돌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전환기적인 위기와 환경에서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시도의 필요성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적절한 방법과 제도화를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혼종문화거버넌스라는 새로운 구조화와 시도는 세부적인 방법론이나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하여 위기의 동북아 정세를 평화공

존의 공동체 건설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IV. 혼종문화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위한 방법론적인 제안과 가능성

현실적으로 동북아에서의 새로운 공동체 구축이나 제도화가 쉽지 않다는 사실은 그동안의 다양한 시도와 방법을 통하여 충분히 증명되었다. 이러한 점은 본 논문에서 제기하는 혼종문화거버넌스라는 새로운 시도가 또 다시 아무런 결과를 초래하지도 못하고 실패로 끝날 이상적인 제안에 그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종문화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몇 가지 선결적인 방법과 제도화를 통한다면 그 실현 가능성은 훨씬 높을 것이다. 이번 장에서는 그러한 선결적인 방법에 대한 제안을 통해 그 실현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동북아시아의 개별 국가 문화가 각각의 고유성을 가진 채 문화상품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선보일 단일 방송시장의 구축과 기구의 설립이다. 이미 동북아지역에서는 통합적인 상업방송이 성공할 수 있는 기반과 규모가 충분한 편이다. 중국이나 일본 그리고 한국 모두 프로축구나 국가대표 수준에서의 축구 열기는 16억에 가까운 시장 규모를 갖고 있다고 평가된다. 더군다나 축구 이외에도 공통적인 관심이 풍부한 배구나 농구 등의 구기 종목 스포츠 등과 수영이나 육상 등과 같은 기본 스포츠 역시 충분한 시장성을 잠재하고 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예능 프로그램의 구성을 판매하고 사들이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면서 문화상품 시장의 통합 가능성 역시 결코 작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부정적인 의견이나 그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갖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특히 경제적 효과나 상업적인 수익성에 의문을 달 수 있기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동북아 국가들의 공영방송 협의체를 먼저 만든 뒤에, 세부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것도 동북아단일방송사를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동북아시아의 문화정체성을 조정해 줄 수 있는 “역사문화콘

텐츠화해조정위원회”(가칭)의 설립이다. 동북아에서의 역사 문제는 쉽게 해결하기 힘든 것이며, 실제로 역사를 바라보는 인식이나 시각차가 정치나 경제의 영역보다도 더욱 큰 것이 현실이다. 중국의 무차별적인 동북아 공정 공세나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인식의 불편부당함 등은 해결의 문제가 아니라 접근 자체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그러나 역사 인식과 정확한 역사에 대한 서술의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일과 프랑스가 시도하여 결과물을 내었던 것처럼 3개국과 북한이 참여하는 동북아역사문제위원회(가칭)나 공동역사서집필위원회(가칭)와 같은 기구를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 공동의 역사교과서 집필을 통해 미래지향적이고 전향적인 역사서술과 정확한 사료 집필을 위한 공동의 노력과 기초 작업의 토대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최근 중국이 주도하고 일본의 적극적인 참여로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새로운 협력 역시 이러한 역사 인식의 공감과 인식의 틀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한다면, 이와 같은 새로운 노력과 시도는 그 어떤 분야보다 시급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세 번째는 현재 동북아시아에서 유통되고 생산되는 다양한 영역의 문화콘텐츠의 저변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의 투자 및 자유로운 시장경쟁의 확보를 위한 새로운 기구의 설립이다. “동북아시아문화콘텐츠발전공사”(가칭)과 같은 형태의 비영리법인 형태의 3국 합작 국영공사의 설립을 통해 아시아적 가치와 독특한 상품 경쟁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공동기구를 설립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국영공사의 설립이 정치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AIB와 연계하여 산하기관의 자격으로 설립하는 간접적인 지원방식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AIB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성격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제기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적극적으로 AIB의 창설 목적과 활동 내역을 동북아의 공존과 번영의 평화로운 방향으로 유도하자는 것이다. AIB에 참가한 국가들의 면모가 이러한 방향에 적합한가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아시아지역의 인프라 투자를 위한 목적이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운다면, 동북아지역의 문화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할 공사의 설립이 AIB 설립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네 번째는 민간 차원의 노력과 시도로서 동북아시아팬클럽동호회와 같은 협회의 설립을 모색하고 자율적인 문화교류를 확산하는 방법이다. 기존에 존재하는 국가별 우호협회나 친선협회는 해당 국가들로부터 지원과 협조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종종 관변단체와 같은 역할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한계와 내재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개인이나 단체의 취향과 기호 중심의 문화단체의 재구성과 재편을 통하여 세 개 국가의 주요한 문화들이 혼종하여 공존할 수 있는 문화적인 기반과 토대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미 한류의 확산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이제는 동북아에서도 특정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예전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문제는 그러한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국가주의나 민족주의를 앞세운 극우단체나 민족주의 단체들이 주도하는 반문화 현상을 어떤 방식으로 축소하고 감소시키느냐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이러한 방식은 하나의 문화적인 조류나 트렌드가 확산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등장하는 갈등과 충돌을 줄여주는 완충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수적인 시도라고 할 것이다.

다섯 번째는 동북아 국가의 특정 지역이나 지정 지역에 ‘문화특구’와 같은 형태의 상호 문화존중의 정책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중국이나 일본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 지역에서의 투자나 관광의 우선적인 권리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몇몇 지방에서는 한국어 안내책자나 한국 문화에 대한 호감 등을 지역문화정책에 포함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상태이다. 중국 역시 동북아 공정 속에서의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지만, 이는 자국의 문화우월주의를 버리지 않는 상황에서 온정주의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이나 일본 모두 동북아에서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서는 상호적인 교류와 협력의 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개선해야한다는 커다란 틀에는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공존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혼종문화특구를 지역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제도화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정책적인 차원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시도와 방법이 현재의 전환기적인 상황과 조건을 해결하고 동북아에서 혼종문화거버넌스 체제를 금방이라도 구현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

근 이전에 여전히 노정되어 있는 한중일 삼국 간의 복잡한 갈등과 충돌의 문제들은 이러한 접근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독도를 둘러싼 영토문제나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벌어진 한국 국민의 수탈과 위안부 문제 등은 그 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중국과 일본 역시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영토분쟁으로 오랫동안 대립하고 있으며,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 침략시절의 만행에 대해서도 중국의 민족주의적인 반감과 갈등으로 인해 침묵하게 대립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 역시 동북아 공정을 둘러싼 오랜 반목과 불신이 자리 잡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외교적 입장 등을 통해 불거지는 충돌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3국 간에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와 해묵은 감정대립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국가라는 이중성이 자리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과 일본은 모두 미국이라는 상수를 두고 서로 눈치를 보아야 하는 입장이고,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중국의 입장과 태도에 일희일비하는 것도 그런 이유이다. 중국과 일본 역시 최근에는 새로운 화해와 협력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반동회의 60주년 기념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역사문제에 대한 인식과 접근에서 화해의 분위기를 보이는 등 향후 ‘대화하는 갈등관계’로의 전환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한국경제』 2015/04/23).

이렇듯 동북아의 3국은 상호 의존성과 협력의 제1순위 대상국이라는 위상과 함께 대립과 갈등의 적대국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비록 그 관계들 간의 어떤 성격이 두드러지나에 따라 반목과 갈등이 더 높아지기도 하고, 우호와 협력의 분위기가 더 깊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와 같은 이율배반적인 관계 속에서도 동북아의 균형과 평화유지는 필수불가결하고, 여전히 미래를 위해서도 상호 동반자적인 입장과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혼중문화거버넌스의 구축과 시도는 한류라는 문화 확산 현상이 동북아에서 나타난 험한 현상을 뛰어넘고 세계의 서로 다른 문화들이 자체적인 독자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동북아의 문화시장과 문화산업 발전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출

발점이 되고자 한다. 동북아를 넘어 세계의 여러 지역으로 더욱 확산하고 있는 한국 문화가 해당 지역의 반문화 현상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민족주의적이거나 한국적인 것을 고집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담을 수 있도록 문화콘텐츠의 다양화와 지역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를 동북아에서 먼저 구현할 수 있도록 ‘혼종문화거버넌스’를 통해 그 가능성을 시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 강동국 (2006). “‘협한류’와 일본 내셔널리즘: 이해와 대응.” 『동아시아 브리프』. 제1권. 1호.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동아시아지역연구소.
- 고길희 (2007). “‘한류 붐’과 한반도 이미지의 양극화 현상 고찰.” 『한국일본근대학회』. 제15집.
- 공용택 (2012). “문화거버넌스 관점에서 본 도시와 기업의 민관협력 공공디자인모델 연구: 서울시-현대카드 아트셀터를 사례로.” 『기초조형학연구』. 13권, pp. 13-22.
- 김명섭·이동운 (2005). “동북아공동체의 이상과 현실: 문화적 대안의 모색.” 『한국과 국제정치』. 21권. 2호, pp. 1-30.
- 김병섭·김영래·서순탁 (2012). “문화재의 관광적 활용에 관한 정책네트워크 분석.” 『한국도시행정학회』. 25권. 4호, pp. 175-207.
- 김승재 (2012). “부친의 지역문화 거버넌스 체제에 관한 연구-시각문화영역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용규 (2014). 『혼중문화론』. 소명출판.
- 김용우 (1992). “통합이론으로 조명해 본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협력체 구성 가능성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제26권. 제1호, pp. 4-6.
- 김의곤·권경희 (1999). “국가의 변질과 상대적 이익: 국가 간 협력에 관한 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 논쟁.” 『국제정치논총』. 제39집. 제1호, pp. 3-20.
- 김홍수 (2004). “문화거버넌스 모형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축제정책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류용재 (2008). “한국 문화연구의 정치경제학적 패러다임에 대한 모색: 한류의 혼중성 논의를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16권. 4호, pp. 2-27.
- 문태현 (2005). “지역혁신을 위한 문화정책거버넌스의 성공요인분석-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17권. 2호, pp. 337-359.
- 박규홍 (2011). “지역문화거버넌스의 성공 요인.” 한국거버넌스 2011년 하계 공동학술대회논문집. 한국거버넌스학회.
- 박수옥 (2009). “일본의 협한류와 미디어내셔널리즘 2ch와 일본 4대 일간지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회』. 통권 47호.
- 박순애 (2009). “일본의 향류소비 성향과 내셔널리즘.” 『한중인문학연구』. 제27호.
- 박정수 (2012). “중화(中華) 민족주의와 동아시아 문화갈등: 역사와 문화의 경계짓기.” 『國際政治論叢』. Vol. 52. No. 5, pp. 69-92.

- 박홍서 (2008). “실용과 관념사이-이명박 정부의 대중 관념외교.” 『현안진단』. 제 128호, 새로운코리아구상을위한연구원.
- 박혜자 (1998). “지역문화정책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모형 연구.” 『도시행정학보』. 11권, pp. 207-233.
- 박혜자·오재일 (2003). “문화행정에 있어 분권화와 정부 간 기능배분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논집』. 15권. 4호, pp. 953-975.
- 서순복·함영진 (2008). “협력적 지역문화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영국 버밍엄 문화 영역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5권. 3호, pp. 241-267.
- 손혁상·최정호 (2008). “한국의 대 아세안(ASEAN) 공적개발원조(ODA)정책: ‘경제 협력’과 ‘개발협력’의 이중주.” 『동남아시아연구』. 18권. 2호, pp. 137-171.
- 신은경 (2011). “지역문화재단의 문화예술 이용요인과 재이용연구: 인천문화재단을 중심으로.”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 오성동 (2007). “한·중 지방정부 간 국제교류의 새로운 패러다임: 경제·문화분야 협력방안을 중심으로.” 『경영사학』. 22집. 1호, pp. 131-156.
- 유현석 (2002). “경제적 지역주의의 국제정치적 접근: 이론적 검토와 APEC에의 적용.” 『국제정치논총』. 42집. 3호, p. 38.
- 윤광재·신성대·이희석 (2011). “문화거버넌스 구축사례 연구: 미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 이동연 (2006). 『아시아 문화 연구를 상상하기: 문화민족주의와 문화자본의 논리를 넘어서』. 그린비.
- 이주현 (2011). “지역문화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방안: 스포츠 산업을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조황식 (2007). “지역문화거버넌스 형성에 관한 연구: 대구광역시 서구, 안동시, 의성군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채원호·주동범 (2003). “프랑스 문화거버넌스 연구: 문화정책 및 행정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7권. 3호, pp. 360-376.
- 최영중 (2000). “비교지역통합 연구와 동아시아 지역협력.” 『국제정치논총』. 40집. 1호, p. 59.
- 최희식 (2013). “동북아시아에서의 해양·영토 분쟁: 독도와 센카쿠 문제를 중심으로.” 『아시아리뷰』. 제3권. 제2호, pp. 33-63.
- 한승준·박치성·정창호 (2012). “문화예술지원 거버넌스 체계에 관한 비교 연구: 영국, 프랑스, 한국사례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50권. 2호, pp. 257-291.
- 허태희 (2014). “2014년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개선: 정책대안의 모색.” 『JPI정책포럼』. No. 2014-02.

- 레이먼드 윌리엄스 (2012). 『마르크스주의와 문학』. 박만준 역. 지식을만드는지식.
- Cowen, T. (2002). *Creative Destruc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ickert, W. (1997). "Public Governance in the Netherlands: An Alternative to Anglo-American 'Managerialism'." *Public Administration* 75, pp. 731-752.
- Kiely, R. (1998). "Neoliberalism Revised? A Critical Account of World Bank Conception of Good Governance and Market Friendly Interven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Services*. Vol. 28. No. 4, pp. 683-702.
- Kooiman, J. (1993). "Societal-Political Governance: Introduction." in J. Kooiman (ed.). *Modern Governance: New Government-Society Interactions*. London: Sage.
- _____ (2000). "Societal Governance: Levels, Modes, and Orders of Social-Political Interaction." in Pierre, J. (ed.). *Debating Governan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Kraidy Marwan M. (2005). *Hybridity, or the Global Logic of Globalization*.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 Rhodes, R. (1997). *Understanding Governance: Policy Networks, Governance, Reflexivity and Accountability*. Bristol, PA: Open University Press.
- Schmitt, T. (2011). *Cultural Governance as a Conceptual Framework*. Göttingen: mpimmg.
- Stoker, G. (1998). "Governance as Theory: Five Propositions."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Vol. 50. No. 1, pp. 17-28.
- 전현준 (2012). "2013년 이후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ARKO』. <http://webzineold.arko.or.kr/?MID=boardInfo&IDX=2&IDX2=244>. (2015년 5월 15일 검색)
- KOTRA (2013). "K-POP을 넘어 K-CULTURE로." 『글로벌윈도우』. http://www.globalwindow.org/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10&MENU_CD=M10103&UPPER_MENU_CD=M10102&MENU_STEP=3&ARTICLE_ID=5000958. (2015년 5월 15일 검색)
- 해외문화홍보원 (2013). "한류 K-Pop에서 K-Culture로." 문화관광체육부. <http://www.kocis.go.kr/promotionContent/view.do?seq=1378>. (2015년 5월 15일 검색)
- "중국과 일본의 화해, 한국 외교만 국제 왕따 되나." 『한국경제』. 2015년 4월 23일.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42303651&nid=103&sid=0117>. (2015년 5월 29일 검색)

한류와 협한의 문화갈등과 충돌의 경계넘기를 위한 제안: 185
동북아시아 혼종문화거버넌스 체제의 모색

| 논문투고일 : 2015년 05월 30일 |

| 논문심사일 : 2015년 06월 02일 |

| 게재확정일 : 2015년 06월 09일 |

ABSTRACT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Vol. 22, No. 2 (2015)

**A Proposal for the Crossing-Border of Cultural
Conflicts and Collisions between
Hallyu and Anti-Hallyu:
Researching of Hybrid Culture Governance System in the
North-East Asia**

Jong-Bub KIM

(Faculty of Global Hybrid Studies, DaeJun Univ.)

This paper examines the multi causes of cultural conflicts and collisions between Hallyu and Anti-Hallyu in the North-East Asia. Also it gives a proposal for the crossing-border of cultural conflicts and collisions between Hallyu and Anti-Hallyu and a researching of hybrid culture governance system in the North-East Asia. In especial this paper proposes some renewal concepts and terminologies as like K-culture, C-Culture, J-Culture and hybrid culture governance system, etc.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a beginning of new research for a overcoming cultural conflicts and collisions between Hallyu and Anti-Hallyu in the North-East Asia and a groping for a solution of peace-coexistence governance system in local area. In addition to this proposal, K-Culture will be a renewal cultural promotion for overspreading to the another world, for example in North America, South America, Europe, Africa and Australia and so on.

▪ Key words: Hallyu, Anti-Hallyu, Hybrid Culture, Governance, North-East Asia